시 론

‘좋은 학생’에 대하여

조 영 서
계수초등학교 교사

3월의 새 교실, 새로운 담임, 낯선 친구들, 아직은 어색한 교실 공기 속에서 아이들은 빠르게 분위기를 배운다. 어떤 행동이 칭찬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말이다. 이 시기 교실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것은 좋은 학생의 기준이다. 대개 그 기준은 명확하다. 말을 잘 듣고, 지시에 빠르게 반응하며, 수업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아이.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손을 들 때와 들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아이. 교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답에 가까운 질문을 하는 아이. 우리는 이런 아이를 보며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준은 과연 바람직한가?. 물론 학교는 공동체이고, 교실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여러 아이가 함께 배우는 공간에서 일정한 규칙과 흐름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교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수업을 운영해야 하고, 모든 아이를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교실은 점점 안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 문제는 그 안정성이 배움의 방향까지 함께 규정해 버릴 때다.

이러한 문제를 깨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교실의 평범한 장면 속에 존재하고 있다. 수업 시간,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다. “선생님, 이거 꼭 이렇게 해야 해요?” 교과서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었지만, 나는 잠시 멈춰 그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라는 말에 아이는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들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생각이었지만,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한 가지 방법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다. 수업은 잠시 느려졌지만, 그만큼 깊어졌다. 그날 이후 교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손을 드는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났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오가기 시작했다. 질문은 더 이상 흐름을 깨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좋은 학생은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아이다. 자신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아이, 다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아이, 주어진 틀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틀을 이해하고 확장할 수 있는 아이가 진정한 의미의 좋은 학생이다.

배움은 본래 불완전한 과정이다. 질문에서 시작되고, 시행착오를 통해 깊어진다. 그런데 교실이 점점 정답 중심이 될수록,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 틀릴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손을 들지 않으며, 새로운 방법보다 이미 검증된 방식을 따른다. 아이들은 매우 빠르게 배운다. 무엇이 칭찬받는지, 어떤 행동이 안전한지를 정확하게 읽어낸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을 조정한다. 그 결과 교실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만, 질문은 줄어들고 생각의 폭은 좁아질 수 있다. 그러다보면 우리는 안정적인 교실은 만들었지만,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 교실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워진다. 교실의 질서를 지키는 것과 생각을 확장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그 균형을 경험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교실은 어떤 기준을 먼저 보여주어야 할까. 진정한 배움의 교실에서 필요한 것은 조용함이 아니라 안전함이다. 틀려도 괜찮고, 질문해도 괜찮으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가 먼저 주어져야 한다. 그럴 때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배움에 참여할 수 있다. 교실이 배움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될 때, 순응은 참여로 바뀌고, 침묵은 질문으로 바뀐다. 새 학기는 늘 새로운 출발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가장 먼저 작동하는 시간이다. 그 기준은 조용히 형성되지만, 한 해를 좌우할 만큼 강하게 작용한다.

교사가 예상과 다른 답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고, 질문이 나왔을 때 잠시 멈춰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것.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 그제야 아이들은 좋은 학생처럼 보이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배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좋은 학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은 교실이 어떤 기준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아이를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

기 고

AI 시대 국가 경쟁력, 인재와 자격 제도 혁신에 달려 있다

김 승 대
남부대학교 기계소재공학과 교수

AI 시대 산업 경쟁력은 기술보다 인재가 좌우한다. 대학에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 제조 기술을 가르치다 보면 산업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AI 기술을 현장에서 운영할 인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산업 변화 속도를 인재 양성과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AI 기술은 제조업과 물류, 의료, 교육 등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공장과 데이터 기반 생산관리 등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 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AI 기반 스마트공장 도입이 확대되면서 관련 인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산업 현장의 변화 속도에 비해 인재 양성 체계와 자격 제도는 여전히 과거 산업 구조 중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자격 체계는 전통적인 기술 분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결합되는 AI 기반 융합 기술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자격 제도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자격 제도는 단순한 시험 제도가 아니라 국가 인재 전략을 구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국가 자격 제도는 산업 변화와 인재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AI 시대에는 전공 중심 자격보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융합 역량을 평가하는 새로운 자격 체계가 필요하다.

AI 기술은 특정 전공만으로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산업 경험이 결합되는 융합 기술이다. 따라서 인재 양성 역시 단순한 지식 중심 교육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자격 제도 역시 산업 변화 속도에 맞춰 보다 유연하고 융합적인 방향으로 혁신돼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역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자격 체계가 마련된다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AI 기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과 제도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기술 개발보다 인재를 길러내는 제도 혁신에서 시작된다.

독자투고

도로 위 정의 실현 ‘교통 과태료 납부’로부터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200일간을 ‘교통법규 위반 및 체납 차량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선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고, 묵묵히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질서의 형평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 파출소 등 전 경력이 합심해 ‘지역 밀착형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안전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며 도로 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계별 강제 집행을 추진한다. 우선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 차량의 물리적 운행 권한을 즉각 제한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한 차량 압류에 그치지 않고 예금 등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를 병행해 실질적인 채권 확보와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끝으로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행정적 제재 수위를 한층 높여 법의 엄중함을 명확히 보여줄 계획이다.

교통 법규 준수와 과태료 납부는 안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다.

성실한 납세는 단순한 금전적 이행을 넘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공공의 질서는 어느 한 기관의 고군분투나 특정 개인의 희생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정한 참여와 성숙한 책임 의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광주 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 위에서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경찰의 굳은 결단이다. 혹여 미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우리 광주 서부경찰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200일의 여정 동안 멈추지 않고 정진할 것이다. 〈고한용·광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중동발 고통과 인내의 시간…차량 5부제 동참하자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중동 정세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부처를 망라한 비상경제본부도 전격 가동한다. 앞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의무화됐다.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로, 하루 3천배럴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에 대해선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서 그쳤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엔 강제 여부를 검토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예고한 대로 카타르가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핵심 생산 거점인 라스라판 산업도시 내 시설이 이란의 미사일에 피폭돼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복구까지는 최대 5년을 예상하고 있다. 원유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유조선이 갇혀 물류 차질도 계속되고 있다. 아직 실질적인 쇼크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4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등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석유류 최고가격제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일상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민생 안정과 경기 순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상 와중에도 공격을 서슴지 않고, 말이 수시로 바뀌는 등 트럼프 식 외교로 인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군 최정예 공수부대 선발대 투입이 초읽기라는 외신 보도에 지상전을 준비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중동전쟁의 확전을 배제하기 어렵다. 에너지 비상사태가 닥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 차질에 대한 공포가 드리웠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어디 한 분야라도 누수가 없도록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지금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다. 5부제를 전면 확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참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수상 태양광 확충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소통 강화를 위해 주요 농업인 단체장 6명을 ‘명예본부장’으로 위촉했다. 공사는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 확대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도 함께 열었다. 보유한 담수호 및 대형 저수지를 활용해 주민과 함께 수익을 나누는 구조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으며, 특히, 발전 이익금을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재투자함으로써 선순환 체계를 확립키로 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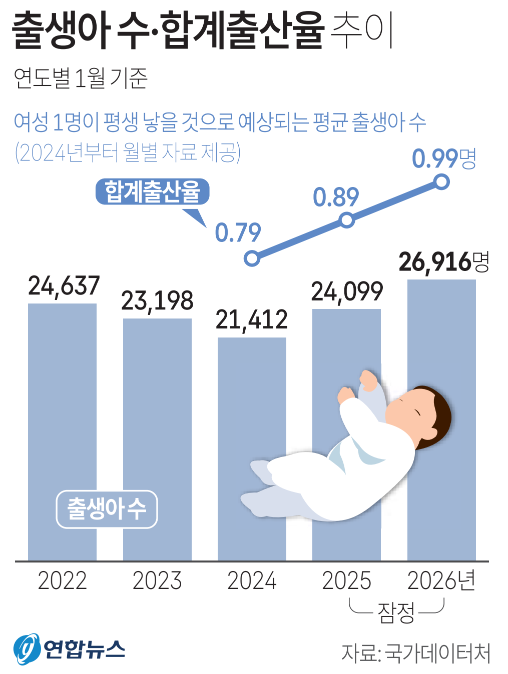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김재식 본부장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세를 폐지한 이후 정부 예산은 사실상 동결된 상태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발생하는 적자 규모가 매년 2천억원대에 달하고, 또 부족한 예산을 메우고자 자산을 매각하며 버텨왔으나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최근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를 5%에서 2.5%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액 면제돼 연간 2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감소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것으로,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에 따른 영농 여건 개선을 위해 수수료를 아예 삭감했다. 아울러 공사는 고령화 현상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으로 청년들이 안정 정착할 정주 환경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팜 보급 및 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태양광은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농가 소득 모델로 떠올랐지만 환경 피해 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인 실증 사례와 수익 구조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물론 잘 활용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다각도에서 고민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

농어촌공사는 현장의 의견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주요 단체와 협력을 두텁게 하기 위해 명예본부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 농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수리시설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와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에 전력하고 있다. 공사는 명예본부장을 ‘행복 동반자’로 지칭하고 있다. 전남 농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서 더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가 약 2만7천명으로 동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30대가 견인하며 합계출산율도 1.0명에 육박했다. 출산의 선행지표 격인 결혼 건수도 증가세가 계속돼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천916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817명(11.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1월 기준 2019년(3만271명)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1월 출생아는 2016년(-6.0%)부터 9년 연속 줄다가 지난해 12.5%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30대 인구 증가와 결혼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9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증가했다.

2024년 1월 월별 합계출산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결혼도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2천640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489건(12.4%) 증가했다. 이는 1월 기준 2018년(2만4천370건)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다. 1월 증가율은 1997년(동성동본 혼인 특례 이후) 이래 3번째로 높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瓚皓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